

최저임금 부담 줄이기 국회가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 1년간 최저임금 70%만 지급” 발의

언어 등 문제로 업무습득 오래걸려
소상공인·중소 부담 최소화 목적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뚝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



지난달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

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

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

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與野 대표단 ‘韓 평화 프로세스’ 성과 거둘까

다음주 2차 제3국서 북미 추가 실무협상

美 공식방문 일정 돌입

美 의회에 남북·북미 관계 입장 전달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순방 대표단이 10일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문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과 여야 간사, 진영·백승주·박주현 의원 등 각 정당의 대미외교 전문가도 함께한다. 역대 최고위급 국회 대표단으로 구성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초당적인 첫 대미 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오는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번 방미 주요 안건은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꼽힌다. 문 의장은 이번 국회 대표단의 방미 목적에 대해 “새로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에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 큰 진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양국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상 국회의장(가운데)이 미국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14일 이후 독자 행보를 예고했고 북미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날 “북미회담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는 일정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의회의 적극 공조가 이뤄질길 바란다”면서도 “한국당이 대표단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번 방미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앞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0월 한국당을 제외

한 여야 4당으로 꾸린 방미 외교단의 화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문제였다.

여야 외교단은 당시 귀국 후 FTA 재개정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 등에 대해 “폐기로 간다는 분위기였다”며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같은 해 11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을 만나 “한미 FTA 협상이 안타깝게도 지역적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전하며 미국 측에 치우친 협상은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응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정의용 실장, 美 대북정책 대표와 면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추가 실무협상이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를 기준으로 아시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장 실장을 만나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였음을 장 실장에게 알렸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 백악실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하는 모습. /청와대

비건 대표와의 면담 후 정 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건, 강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정 실장-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단계적 한반도 정세 논의가 진행된다. /우승준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신설법인 10만개 돌파”

조정식 더민주 정책위의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벤처붐’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경제정책 일환인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 활성화’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고 운을 뗐다.

조 정책위의장은 계속해서 “혁신창업 붐이 이어지도록 자본시장 구조 및 관행을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혁신벤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등은 민주당이 올해 추진하려는 입법정책으로 해석 가능하다.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운용하는 간접투자방식을 말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밝힌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당정협의와 연관이 깊다. 당정은 당시 머리를 맞대고 ▲사모발행 기준을 청약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사모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청약권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수에 초점을 맞춘 것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 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우승준 기자 dn1114@

해수부, 불법어업 근절 위판장·횃집 단속

정부가 불법어획물 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 및 횃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

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단은 먼저 주요 항구 및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횃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농식품부, 세계식량지수 1.8% 반등

지난해 하반기 하락세를 이어가던 세계 식량 가격이 새해 들어 본격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61.8p)보다 1.8% 오른 164.8p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란 FAO가 곡물, 유

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국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매달 발표하는 지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지난해 12월 주춤하더니 지난해에는 반등에 성공했다. 유제품·유지류·설탕 가격이 상승했고, 곡물·육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세종=최신용 기자